

칠레는 우리나라에도 바나나 등 외국농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돌(Dole), 유니프루티(Unifruiti) 등의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대규모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한 6대 메이저가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듯이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산업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그 무슨 국익을 타령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이야기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한국농업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 다국적 곡물기업의 횡포 앞에 7천만 겨레의 생존마저 내 놓는 거대한 괴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 5. 암울한 농업, 파괴되는 농촌공동체, 몰락하는 농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애초 '식량자급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그 어떠한 가격보장대책도 없이 저 농축산물가격정책하에 농축산물의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산품의 수출로 별로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수, 축산업의 몰락을 재촉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농촌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보건진료소의 폐쇄 등 교육, 보건복지마저 축소하면서 농촌을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쏟아지는 수입농축산물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94년 UR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희생 기미 없이 침몰하고 있다. 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사이 현지통신원 1,0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년전과 비교해 현재 농촌생활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15.1%에 그쳤고, 농사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 48.6%, 만족한다 12.6%, 38.8%가 그저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5년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9.2%로 나타난 반면 나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65.1%에 이른다.

또 자녀에게 농사를 대물림 할 생각에 대해서는 3.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렇게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내농업은 아무런 보호대책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수입개방정책속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고스란히 빚으로 누적되고 있고 이제 지어볼만한 농사가 없는 실정이다.

## 6.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가 WTO체제하에서 가혹한 피해를 보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자주자립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자본주의의 태생적 모순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외부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게다가 IMF 위기관리체제에 의해 대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 한국자본주의에게 WTO뉴라운드느 UR협상보다 더욱 가공할 파괴력으로 닥쳐올 것이다.

지난 시기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면서도 농업이 고용과 시장, 식량안보와 사회적 완충역할로서의 일정한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었으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개방이 전면화되면서 농업의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도 폐기되어 가고 있다.

2001년에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농업협상의 본격적인 논의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서 미국·김대중정권과 농민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국주의와 매판권력에 의해 야기된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이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고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지배 책략에 맞서 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

급하다. 이점에서 WTO체제하에서 강력한 외부적 규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과 WTO뉴라운드 및 각각의 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략과 연대운동으로 보다 분명한 주타격 대상과 전술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2001년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 개방농정 철폐, 민족농업시수를 기조로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WTO농업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을 대중적 고리로 농민개혁입법실현과 조국통일운동에 사업과 투쟁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 전략적으로 반미 자주통일과 통일에 대비한 민족농업시수의 가치를 들고 전술적으로는 농업개혁입법과제 쟁취와 남북 농민자주교류 사업을 실현해야 한다.
- 대중투쟁의 고리이며 반미 조국통일운동과 WTO개방농정 철폐투쟁의 전략적 접점인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 규탄과 가격보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 실천적으로는 정세인식과 조직정비, 투쟁주체와 동력확보가 시급하며 대중사업과제로는 가격보장투쟁을 중심으로 선전, 투쟁하면서 점차 개방농정철폐, 수입개방저지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전략적

접근을 위한 북한바로알기, 남북공동선언 해설, 남북농민교류 및 통일농업의 구체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상과 WTO농업협상교양, 협동조합개혁 등 핵심 농업·농민 현안 정책개발, 민중연대와 지역전선구축사업까지 병행, 발전해 나가야 한다.

- 읍·면마을 조직 등 하부조직 정비와 강화, 이를 위한 다양하고 실정에 맞는 대중사업이 중요하며 '민족간부정치조직 간부대중간부' 3위일체의 골간체계구축과 간부활동가 양성 및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조성된 정세에 조응하여 민족농업시수와 조국통일농업을 실현과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양민학살 진상규명투쟁 등 조국통일운동과 반제자주화 투쟁에 신심을 다해 나서야 한다.

# 철거민 투쟁사

전국철거민연합 \_ 사무처

## 들어가며

1. 주택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부의 저장과 가치증식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의 논리와 이러한 과정을 방조, 조장하는 주택정책에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 (동아일보에서)

2. 땅은 이미 생활의 기초로서가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토지소유 편중과 땅값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토지 문제는 곧 주택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다 (한국일보에서)

60년대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생산체제가 변화하게 되자 농민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심 외곽으로 집중 이동하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으로 재편성되게 된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이농·도심집중화현상은 극심한 노동통제를 낳았으며 도시

빈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생산, 이에 대한 새로운 착취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거민이라는 계층은 자본주의의 심화·발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으며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서 개발이라는 제3의 착취기계의 강제된 도구로서,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동형제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한다.

토지·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 있듯이 개발을 통한 토지·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며 독점자본의 포식을 위한 토지투기, 즉 건설자본의 이윤착복의 수단으로 이미 한정지어져 태동할 때부터 이미 착취에 대한 또 다른 투쟁을 예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70·80년대의 철거민투쟁은 내 집이 철거되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투쟁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다. 따라서 철거민투쟁은 그 투쟁의 양식도 다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근본적으로 타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건설자본과 자본가정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온갖 폭력만행을 청부받은 자본주의 패륜아 철거깡패와의 한 판 승부로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역시 파괴는 또 다른 건설의 역사를 부르는 법,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남한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게 되는 87년 노

동자 대 투쟁은 철거민들에게도 의식적 각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때부터 철거민투쟁은 기간의 종교적, 지역적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었으며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수동적인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적의식적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직체계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본의 속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공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철거민투쟁은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의 과정은 또 다른 파괴를 부르는 법, 철거민투쟁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70·80년대 강제철거의 양상이 건설자본과 자본가정권의 물리적 탄압(철거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 90년대 중반의 강제철거는 이전의 물리적 탄압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탄압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철거민 조직 외곽 작업이나 온갖 언론매체를 통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철거민투쟁에 일대 혼란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개량·기형적 철거민투쟁의 기류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파괴와 건설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한다. 계기적 한시성과 경제성에 매몰되어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굴종한 개량·기형적 철거민투쟁을 배격하는 것, 자본주의의 모

순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의 문제를 매개로 한 노동자계급의 동맹세력으로 자본에 대한 반격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단지 각개의 대오 속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대전선 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지운 또 하나의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1. 철거민 투쟁 역사

### ① 철거민투쟁의 핫볼 : 광주대단지 폭동

대단위 철거민 투쟁의 불씨는 6·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70년대를 중심으로 도심지 곳곳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화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한다. 사실은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근시안적 무차별 과잉증복투자로 일관했던 자본가정권의 만용의 극치가 토해낸 찌꺼기이다. 불황에 휘청대던 중동건설경기는 전격파탄이 났고 일시에 급거 철수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복구하려는 건설자본의 살인적인 착취욕과 정통성에 자신이 없었던 박정희군정의 존립기반관리에 소요되는 무한대의 검은돈, 비자금조성 보고로서의 개발사업은 이땅의 끔찍한 민중수탈사가 가중되는 천민자본주의만행의 도약대가 되었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철거민들을 내다버릴 처리장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울도심지 외곽의 황무지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이다.

서울 곳곳의 무허가판자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업화 정책으로 무너진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이농민들이 도시 전역에 무단정착한 곳으로 대규모 빈민가를 만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이농민수가 거의 400만명으로 그 숫자가 모두 서울로 집중되었으니 당시 도시 곳곳의 무허가 정착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70년대 접어들면서 산업화의 고도성장 그늘 밑에서 저임금·노동조건 악화라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의 노예로 전락한 참혹한 노동현실, 민중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경제발전정책에 항거하여 노동자 전체일이 분신을 하면서 당시 고통받던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에 불씨를 당겼다.

이 투쟁의 불꽃은 도시빈민들의 저항전선으로 확장되면서 폭넓은 민중투쟁의 들불로 타오른다.

과잉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무조건 도시로 끌어들이는 박정희군정은 일반 부러먹으면 됐지 잠자리까지 봐줄 수 없다면서 급기야 서울시내 빈민촌 판자집을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강제 철거하기에 이른다. 박정희군정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광주대단지'(철거민유치장)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서울시가 평당 4백원선에 경기도 땅을 매입, 철거민을 보내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보지만 팔

더라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단한푼의 정치자금도 올라오지 않는 달동네 판자촌을 싹 쓸어버리고 청계천을 복개공사를 하여 그 부지만 팔더라도 엄청난 수확이라는 잇속이 도사리고 있었다. 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와 5월 25일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대단지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약들이 난무했고 군사독재정권 연장에 소요되는 검은 정치자금조달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작된 투기복마전을 타고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광주대단지에 투기꾼들이 주축이 된 부동산매매, 건축공사들이 시작되었다. 당시 800원하던 경기도 땅은 12만원까지 뛰어 올랐다. 계약적인 부동산투기붐의 희생양인 전매입자에게는 토지20평을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씩 불하하며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하라는 통고장이 송달되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에는 분양토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하며, 분양토지에다 6월 10일까지 집을 짓지 않으면 불하를 취소한다는 내용 외에는 이들을 철거민으로 만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치지도 않았다.

실상가상으로 정부의 토지전매금지 조치로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일체 중단되고 대부분 공사판에 연명하던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난의 허덕임이 증폭되었다. 참다참다 견디다 못한 분노한 주민들은 8월 1일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지켜보기 위해 성남 출장소 근처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실업자를

구제하여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토지불하가격을 원 철거민의 경우와 같이 평당2천원 선에서 5년 할부납부로 해줄 것과 선거 때 공약한 대로 각종 세금면제 약속을 이행하라'였다. 이는 각각의 이해와 요구의 차이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강고한 대동단결력이 담보된 요구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공권력의 폭력이었다. 공권력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행정당국의 폭력만행에 분노한 주민들은 순식간에 성남출장소는 물론 관용집차, 트럭을 불태우고 버스를 빼앗아 타고 서울을 향한 반정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폭발적인 주민들의 저항의 힘으로 대부분 요구를 관철시켰으나 토지투기에 편승한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이후 계속될 개발투기와 검은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살인만행의 서곡이었다.

비록 세상을 왕창 엎어버리지는 못했지만 광주대단지 철거민전선은 변혁의 주체로 빈민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도시개발이 결코 고통받는 노동자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투쟁의 정당성을 체득케 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제기하였다. 이로써 철거민투쟁을 폭발적 역동성은 예고되었으며 향후 철거민투쟁의 햇불로 빈민폭동으로 오늘에 맥박치고있다.

## ② 철거민투쟁의 포문을 열다 : 목동투쟁(1983~1985)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영화방식',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싼값에

공급'한다고 하면서 달동네 빈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던져주며 등장했던 「목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1983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목동 주민들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한 정부의 서울시내 판자촌 정리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를 당해 이곳 목동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목동 공영개발은 서울시가 직접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목동 개발지역내 수십 만평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 다음 아파트를 직접 짓고 다시 이 아파트를 서울시가 직접 분양하는 형태의 개발이었다. 정부가 개발사업 전체과정의 핵심주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이는 철거민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철거민 탄압의 주체가 군부독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으며 자연히 투쟁의 적대적인 대상도 박정희군정이 되었다. 결국 목동철거민투쟁을 통해 군부독재의 반민중적·반민주적 폭력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광주대단지 폭동 이후로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인 모습으로 철거에 대응해 왔던 70년대1)와 달리 대규모적으로·조직적으로·계획적으로 철거민투쟁을 전개하였다. 비록 공권력의 무차별적 공격과 대량구속으로 강제해산 되었지만 그 동안 무려 100여회 이상의 가두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국회의원 낙선투쟁까지 수행하는 등 철거문제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경인고속도로를 무려 4번이나 차단하면서 50여명이 연행되었고 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15회에

결쳐 청사진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지역에서 생긴 구속동지 구출을 위해 구속자석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학교를 비롯한 각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목동의 철거민투쟁과 구속사실을 알려나갔다.

또한 주민총회에 자녀들의 등교거부를 결정하면서까지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도부 50여명이 신민당사 점거농성에서 5일동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한편 주민들은 500~700명 단위로 신민당과 KBS방송국, 영등포로타리 등지에서 가두진출 점거를 불사하며 격렬한 지원투쟁을 벌여나갔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침탈에 맞서 철야 경비조와 지역 대기조는 공권력을 견제해냈으며 주민 스스로 회장·부회장·총무·각 통반장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지도부의 타협적인 모습이 보일 때 지도부의 반성을 주민총회를 통해 비판하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적인 운영으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자연발생적인 대중조직이 의식적으로 단련되어 나아갔다.

" 1950년대 화재민과 수재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판자촌 등이 서울 도심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재개발과정에서 철거민들을 시외곽으로 집단이주, 이 과정에서 무수한 철거와 복구, 또 다시 철거되는 수많은 철거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철거민들은 지역내에서도 조직화되지 못했으며 요구사항조차도 '얼마동안 텐트를 치고 살게 해 달라'는 등의 초보적인 수준 이었다.

결국 가옥주건 세입자건 대책이 전혀 없었던 목동공영개발사업에서 철거민의 투쟁으로 가옥주들은 최초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감정가보상)을 인정받고 세입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4개항의 대책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구청장 감금조작사건을 터트리면서 수천명의 전투경찰과 무술경관들이 동원되어 최루탄으로 동네를 완전히 뒤덮은 채 지도부연행구속과 전투경찰 상주를 통한 주민 감시통제로 지역은 해체되었다.

80년대 도시빈민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이 목동 공영개발 저지투쟁은 첫째, 최초의 조직적·계획적인 빈민생존권쟁취투쟁이고,

둘째, 오랜 투쟁기간 동안 몇차례 지도부 교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올바른 투쟁을 대중적으로 추구한 투쟁이었으며,

셋째, 70년대의 투쟁경험과 성과들이 대중적 설득과 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종교운동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빈민운동이 올바른 위상을 찾게 되었으며,

넷째, 계속적으로 도시빈민의 삶을 질곡하고 의식을 짓눌러온 '사유재산'이라는 이념공세를 기만적이긴 하지만 '법에 없는 대책확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후 계속된 합동재개발 반대투쟁의 원동력이 되는 등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3년간에 걸친 목동투쟁은 규모 면에서나 치열함에 있어서 커다란



반항을 일으켜 정부의 반민중적인 주택정책을 질타했다. 당시 철거민투쟁을 통해 나타났던 주민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은 민중들이 조직을 만들어 단결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점차 이 문제를 소수의 착취자가 다수의 피착취자를 착취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폭로해내었다.

### ③ 지역연대 모색기

#### 사당3동투쟁 - 가락지구연대투쟁위원회(1985년)

1985년 4월부터 시작된 사당3동 투쟁은 지난 목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대중들의 노력이 함께 했으며 목동 철거민들의 단결투쟁으로 쟁취한 어느 정도의 성과물에 고무받은 사당동 철거민들은 지역신문「산24번지」를 발행하며 지역주민을 조직화·의식화시켜 나가는 등 활발한 대중사업을 펼쳐나갔다. 사당동 철거민들의 타격대상은 주로 지역구 민정당 사무실, 구청 그리고 여의도 국회앞과 같은 정치적 장소였으며, 사당동 지도부들은 사당동의 조직경험을 각 철거지역에 파급시키면서 투쟁을 지원·지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같은 철거지역인 오금동, 사당동, 신정동, 하왕십리 등 주민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철거민들의 연대투쟁을 탄압하고자 하는 적들에게 사당동은 그 비중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공격 목표였다. 당시 연대투쟁의 핵심이었던 사당동에 공격이 집중되고 연대활동의 일시적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강행된 암사동, 신당동, 양평동, 오금동, 등의 강제철거는 다시 사당동으로 하여금 이 지역들의 견인과 연대투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대규모 유혈사태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들어서 연대투쟁에 극렬 반대하던 종교운동권의 교활한 개량주의 논리에 부딪친다. 이미 당시부터 있었던 지역 회장단회의는 종교운동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던 상계동 투쟁은 종교계를 통해 철거민투쟁의 참혹함을 사회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종교운동권의 지나친 간섭으로 상계주민들은 주체성을 상실하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전락하게 된다. 종교계가 명동성당농성을 구결형태로 이끌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계동주민들은 이해타산과 기회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동적 안주는 주적과 타격목표를 상실하고 극심한 내분을 불러와 급기야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지역은 양분되어 급속하게 붕괴된다.

한편 당시 서울시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이 주종을 이루었고 대부분 대규모 도시빈민밀집지역이 그 목표가 되었다. 한참 속도를 붙여 나가던 합동재개발사업과 이에 맞물려 자행되었던 강제철거의 확산은 철거민의 연대투쟁과 연대조직 건설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송파·강동지구에서

벌어진 폭력철폐만행에 대응하면서 이미 지역의 조직을 넘어 '가락 지구투쟁위원회'라는 연대투쟁조직의 맹아가 전투력이 높은 평화촌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연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서히 정권과 건설재벌의 개발투기를 위한 정경유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철거민들이 지역을 넘어 개발형태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다. 몇몇 지역씩 인근 철거민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것들이 다시 행정구역을 넘어 단일대로 뭉쳐 나아갔다.

**④ 종교적 빈민운동의 한계를 넘어 철거민 자주적인 연대투쟁단일 대오를 건설하다 : 서울시철거민협의회(1987년 7월 17일)**

87년 6월 민주화투쟁 한가운데를 달려온 철거민투쟁은 전체 민운 진영과의 연대투쟁 위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매개로 각 철거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각성과 함께 대대적인 민중연대전선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강제철거를 통해 군부독재의 실상을 체험하고 군부독재 타도투쟁에 전국민적 호응이 실리면서 철거민들은 이후 6월 26일 평화대행진, 7월 9일 이한열열사 장례식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주화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기만적인 노태우의 6·29 선언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강제철거에 맞서 양평동은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한다. 이곳에서 종교운동권이 지도하고 있는 회장단 회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비판적 평가가 고조되었으며 철거민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농성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농

성지도부가 민주당사 농성을 해산한 뒤 곧바로 사당동, 평화촌, 강동 지역과 함께 27개 철거지역이 연대하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를 발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그간 철거민투쟁을 같이 해왔던 천주교도시빈민협의회, 가톨릭빈민협의회 등은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거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 '태어났어도 탄압에 의해 얼마 가지 못할 조직' 이라고까지 혹평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철거민협의회는 그동안 종교단체에 기대려는 구습을 깨고 철거민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철거민대중의 명실상부한 지도부로 성장하게 된다.

사당3동 투쟁의 패배 그해 겨울은 창신동, 평화촌, 양평동, 문정동, 석촌동 등 8~9개 지역의 100채 미만의 판자촌 천막집만이 남겨진 채 겨울을 맞았다.

88년 1월 8일 철거잔해에 깔려 죽은 사당동 임채의 어린이 장례식으로 시작된 서울시철거민협의회 투쟁은 1월 31일 임대주택 쟁취대회로 이어졌고, 다시 도화동, 신림동, 구로동, 전농동 등지의 신생지역이 세대위를 결성하였다. 4월 들어 대현동, 구로3동, 수유동 지역의 철거민들이 세대위를 결성하고 돈암·동소문동 지역이 서철협 투쟁전선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철거민투쟁의 자주적결서체로서 철거민들의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대표체로서 기반과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서초동 일대의 비닐하우스 지역에 거주하는 2만여세대 이상의 도시빈민들은 87년 7월부터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지도에 따라 지역마다 '자치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서철협에 가입하였다.

1989년 3월 18일 돈암동세대위 정상률 부회장의 “이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막을 수 있다면 한목숨 받치겠다”는 유언과 불굴의 투혼을 불사른 열사투쟁의 파고가 높아갔다. 열사정신 계승 철거민생존 쟁취투쟁에 민족민중운동의 역량이 실리면서 폭발적인 군사독재정권 타도투쟁으로 몰아쳐 갔다.

과죽지세로 터져 올랐던 철거민투쟁에 놀란 노태우정권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마침내 이땅에 최초로 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들을 도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순환식개발에 입각한 주택정책수립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철거민투쟁에 전체민중운동진영의 역량이 총화된 초유의 민중투쟁에서 서철협은 중심주체로서 전선투쟁을 폭발적으로 선도하였다. 드디어 철거민투쟁의 역동성이 이땅 민중투쟁사에 역사적인 커다란 획을 남긴다. 바로 민중주거권 쟁취(공공책임의 주거권 보장)라는 가치 혁명적인 성과를 쟁취해낸 것이다. 거침없이 진출했던 철거민투쟁은 정치적성과도 뚜렷하여 빈민계층이 발현하는 근원인 자본주의 사회구조적 모순에 온몸을 던져 깨지면서 투쟁하며 체득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체제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압제와 착취질서의 질곡에서 빈민층 대량양산체제가 고착화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폭발적인 진출은 빈민생산체제를 박살내기 위한 빈민부문 전선투쟁

구축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받아왔고 빈민투쟁 통일대로 건설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선다.

서철협은 전체 민중투쟁의 승리적인 기세들을 지지대로 생존권사수 결사항전의 결의로 길거리 노점상들의 결사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한다. 전빈련의 눈부신 투쟁은 향후 노동자 농민 빈민으로 일커리지는 민중3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기위상을 드높이며 이땅 부문운동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천명한다.

또한 서울시철거민협의회는 부산의 가야1동·괴정동·당감3동·문현1동·범일6동·일산2동의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마침내 11월 24일 부산시철거민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기반을 토대로 철거민투쟁은 남한땅 방방곡곡의 산야에 타고르면서 확대·강화·가속도를 붙이면서 변혁투쟁체로 자리매김 된다.

### ㉑ 전국철거민연합 탄생(1994년)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철거민 조직의 대통합 노력은 9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과정들 속에서 철거민투쟁은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의 과정은 또 다른 파괴를 부르는 법, 철거민투쟁은 90년대 중반

에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70·80년대 강제철거의 양상이 건설자본과 자본가정권의 물리적 탄압(철거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 중반의 강제철거는 이전의 물리적 탄압과 더불어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탄압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철거민조직 와해 작전이나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철거민투쟁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개량적 철거민투쟁의 기류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파괴와 건설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한다.

자생성과 경제성에 굴종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굴종한 개량적 철거민투쟁을 배격하는 것,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의 문제를 매개로 한 노동자계급의 동맹세력으로 자본에 대한 반격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단지 각개의 대오 속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대전선 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 바로 이 역사적인 요구를 담보해야하는 확대·강화·발전된 철거민대오 전국 철거민연합의 출범은 이땅 진보적 민중투쟁의 큰 걸음이다.

## 2. 주택정책의 허와 실

우리 나라의 체계적인 주택정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주택정책이라고는 전쟁 중의 주택 손실로 인한 주택의 절대 부족으로 수용소나 간이주택을 임시 구호적인 차원으로 정부에서 몇몇 미미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정책은 성장뿐 아니라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건설 정책도 이에 맞추어 진행된다.

### ① 박정희군정의 주택정책

중공업 중심으로 생산체제가 변화시키면서 정부에서는 값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통한 이농화 정책을 표면화시킨다. 농민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심 외곽으로 집중 이동하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으로 재편성되었고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극심한 노동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속에서 도시 빈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주거권을 담보로 한 자본의 민중에 대한 새로운 착취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과 불량 무허가 주택정비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주택문제는 경제개발정책의 주요한 부문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침탈야욕에 눈먼 쿠데타정권이라는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하늘을 가려서라도 정통성을 세워보려 목을 매고있었다. 야수적인 착취욕은 정치자금 한푼 안나오는 지지분하고 냄새나는 꼴보기 싫은 빈민판자촌을 싹쓸어 녹지조성으로 국위선양이라는 전시효과로 정통성을 외국에서 구걸하는 한편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들의 삶의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속여 토지투기를 통한 정치자금도 챙기는 주도면밀함을 과시하였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살인적인 무력침탈을 당하고 쫓겨난 철거민들은 도심외곽의 구릉지에 땅굴 등으로 자연부락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지원·지검 코앞인 꽃마을 2,300세대로 꽃을 기르던 비닐하우스촌으로 방화살인이 끊임없었다.

## ② 5공 주택정책

무고한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그 피로 등장한 전두환 제5공화국 정권은 국보위 시절에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동안 공공부문 2백만 호, 민간부문 3백만 호 등 도합 5백만 호의 집을 건설하여 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81년에는 1·4조치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주택경기가 부추켜지지 않자 81년 다시 5·18조치를 터뜨려 양도소득세를 더욱 완화하였다. 즉 집을 새로 산 사람이 되 팔 경우 양도세율을 5%로 낮추며 25.7평이하의 집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투

기꾼들의 입맛을 돋구어 민간 건설회사들이 짓는 집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만 복돋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힘입어 82년부터 아파트 투기가 판을 치게 되자 정부는 12·22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총별로 이전보다 높게 매기고 청약예금 가입자의 영순위제도를 폐지하며 착공할 때 분양하던 아파트를 10-20%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분양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래도 안되자 정부는 83년 들어 2·16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하고 미등기 전매 행위를 억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25.7평 이상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투기가 잡히지 않고 땅 투기로 변질 기미가 보이게 되자 정부는 4·18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매기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2년 이상 보유주택을 제외하고는 83년 7월부터 없애고, 토지종합재산세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85년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9·5조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합동토지개발을 유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발투기에 의한 거품경기부양책으로 되돌아갔다.

이렇듯 80년대 주택정책은 양도소득세를 투기가 심하면 세율을 높이고 경기가 침체되어 집이 너무 안지어 지면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주택의 수요·공급에만 의지하면서 뒷북치는 것으로 일관했다. 서민

의 집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배려도 없이 주택을 전체 경제의 거품 경기조절 수단으로만 이용해온 셈이다. 이 같은 5공화국의 무대책 정책은 6공화국에도 이어져 88년의 8·10부동산 종합대책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단축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집세소득에 과세 하겠다는 등 미봉책으로 되풀이하였다.

### ③ 6공의 주택정책

6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 호 주택건설을 약속했다. 노태우는 당시 2백만 호 건설만 호 건설만 92년까지 이루어지면 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불어넣었다. 지난 40년동안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계획을 세워 집을 많이 짓겠다는 것에 국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재벌과 투기꾼이 올 집은 없었다. 집 없는 서민들이 그동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아파트를 못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구임대주택은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계획된 25만호는 극빈계층인 생활보호 가구의 4분의 1만을 겨우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근로자 복지주택은 87년 이후 고양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자의주택문제를 악용하여 노동자 간의 분열을 조장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 복지주택 25만

호 중에는 10만호가 사원 임대주택으로 따로 떼어져서 15만호를 분 양하게 되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5년이상 장기 근속자이고 월80 만원 이하 임금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989년 말 현재 75만이나 되는 데 반 해 공급은 15만호에 불과하여 5:1의 경쟁을 보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대상 선정은 기업체 내의 자체적인 점수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6공화국의 200만호 주택정책 계획과 그 실적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돈을 융자하여 짓는 공공부문 집 건설이 전체의 1/3을 약간 넘을 뿐이었고 그 실적을 또한 민간부문 실적률130%에 비해 그 절반이 조금 넘는 79%에 그쳤다. 당시 근로복지 주택은 건설자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도 안된 채 허겁지겁 발표한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노태우정권은 '국가안보와 자유경제체제에 도전 하는 세력들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주거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고 영구임대주택의 도입의도를 털어놓았다. 2백만호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면 88년의 주택보급률 69.6%가 92년에 가서는 72.9%로 높아진다고 자신하였으나 오히려 주택보급률은 곤두박질 쳤는데 이는 지어지는 집마다 무주택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투 기꾼의 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200만호 건설계획은 물량위주의 정책으로 소유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집만 지어 투기꾼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만 제공해 준 셈이다.

#### ④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

김영삼정권의 주택정책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 주택부문 계획에서 97년까지 5년간 주택 3백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공 당시 노태우의 주택2백만호 건설에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았던 것처럼 문민정부의 3백만호 건설은 또 다시 자재과동, 임금상승, 부실공사를 유발하였다는 지적을 발표 초기부터 받았으며 예상대로 엄청난 부실공사를 조장하였다. 게다가 93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김영삼정권은 재임기간 5년동안 공공주택을 취임 당시 130호에서 5만호로 축소해 지을 계획임을 밝혔고 그나마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건립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시켜 놓았다. 서울시관내 12개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건립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켜 놓았다. 서울시 역시 12개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산마저도 1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데도 겨우 7천억원만 마련된 상태이고 부족분을 비롯한 향후 건립 될 임대주택을 매입

할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세우지 못했다.

또한 94년 초 건설부는 준농림지에도 일반주택건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지는 계속 줄어들면서 이처럼 확보된 택지를 투기의 원천으로 삼아 거품경제의 폭발전 저편에서 괴물 IMF가 아가리를 벌리고 균침을 흘리며 돌진해 오는 것을 은폐하려다가 세계적인 개망신당했다.

#### ⑤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

김대중정권은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전형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달성, 그린벨트 재조정, 임대주택건설 확대 및 임차인 보호, 토지보유세금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이 그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주택부문에서는 2002년까지 1가구 1주택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해마다 2%이상의 주택보급률을 높여 매년50만 가구씩 모두 2백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1가구 다주택 무한소유제가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택보급률 100%달성이라는 사실은 실상 실효성이 없다. 전 국회의장 박준규는 12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자본의 질서 재편 속에서 남한에서도 20대 80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확대되면서 주택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토지개발과 관련 민간자본유치를 외치며 국공유지 매각·해외매각을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의 행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김대중정권의 주택정책은 핑계정책에 다름 아니다. 김영삼정권과 IMF에게 모든 것을 몽땅뒤집어 쫓우고 떠넘기는 파렴치한 말장난이 김대중정권의 유일한 주택정책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공격을 통한 공권력의 폭력통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변화의 기미조차 없다. 이것은 김대중을 오랫동안 적당히 길들여왔던(몇차례 목숨을 건져주는 -이것 또한 계약적인- 극적인 연출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치밀한 사전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자본의 허수인, 꼭두각시정권으로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다.

'99년 도원동 권선4지구에서의 만행과 '2000년 6월 민주당사 총재 실점거투쟁 강제진압에서 아줌마가 5명인 철거민 7인을 상대로 항공기피랍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인을 진압용 섬광탄을 난사해서 폭력연행하여 치료조차도 못하게 하는 살인만행을 서슴치 않았던 현실에서 김대중정권의 본질은 완벽하게 밝혀졌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착취정책으로 정권쟁탈용 거대정치자금을 멋대로 굶어먹는(서울시청 개발관련 6급 공무원말단이 200억을 갈취함)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탐욕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땅의 부동산 시장 잠식에 나선 초국적자본의 한입거리에 불과한 작지만 고이윤당

어리 부동산장악은 시간문제이다. 이렇게 산하를 움켜쥔 자본의 무한 착취야욕이 물고 올 만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소한 장악당한 땅을 붉게 물들여야하는 이땅 민중들의 피를 끝없이 쥐어 짜내게 될 것이다. 이 참혹한 만행의 앞잡이가 바로 김대중정권이다. 이에 맞서 싸우는 투사들은 국내자본이 아니다. 물론 노동자계급이며 국내외 어느곳 그 누구를 불문하고 자본가는 민중의적이다.

### 마무리하며

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단순히 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주택의 독점, 정치자금 조성용 개발정책의 문제점들로 인한 것이 자명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뒤받침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문제점과 토지·주택·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매각반대와 개발이익환수, 공익기조 공공의 계획개발과 영구임대주택의 정착화, 1가구 1주택제도 도입, 토지·주택초과소유 중과세 등 전향적인 세계전환, 순환식개발 정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투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을 고민하기에 앞서 중심과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현재의 국가권력은 자본의 무한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동통제와 민중생존 압살 만행을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대응은 명확한 정치적 각성에서 가능하며 여기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가 뚜렷해지고 있다.

남한자본주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는 단순히 철거민만의 문제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철거의 모순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존권을 약탈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투쟁이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토지, 주택정책의 본질·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수탈을 깨부수고 임금노동체제를 끝장내야하는 계급투쟁이다.



## 2001년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평가와 과제

민주노동당 \_ 김광수

###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의미

민주노총이 3월 6일 중앙위원회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면서 2001년 범민중진영의 정권퇴진 투쟁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IMF 이후 강요된 노동자 민중의 민생파탄(노동자들은 정리 해고와 대규모 실업,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약화로 고통이 심화되었

으며, 농민들은 개방농정과 농산물 가격 저하로 헤어나올 수 없는 파탄에 빠졌다.)의 주범인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의 선언이다. IMF 초기에 노동자 민중들은 고통을 감내하였다. 그러나 대우자동차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등 김대중 정권의 탄압에 대한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농민들은 봉기에 가까운 투쟁을 전개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그 상승하는 투쟁의 목표가 바로 김대중정권 퇴진이었던 것이다.

둘째,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은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즉 대적투쟁을 명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이유로 의사들에게 수가만 잔뜩 올려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공교육을 파괴하여 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요되었다. 또한 민중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을 재벌을 살리는 데에만 쏟아붓고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그러한 정책의 주범이 바로 김대중 정권이며, 정권퇴진 투쟁은 그러한 김대중 정권의 집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셋째, 운동진영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대반격에 나섰음을 알리는 투쟁이었다. 지긋지긋하게 계

속 당해은 3년여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김대중하고 한판 붙자고 선언한 것이다.

### 실질적인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상반기 투쟁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민주노총이 결의하고, 민중진영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민중운동 진영이 김대중의 굴레와 일방적인 수세의 국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진영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고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상반기동안 정권 퇴진투쟁은 성과있게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상반기 투쟁을 임단투 시기집중이다 정권 퇴진투쟁을 끼워넣는 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상반기 투쟁의 주요 동력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단위사업장의 임단투 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권 퇴진투쟁을 하려면 임단투 시기집중이 아니라,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집중시켜야 했다. 더구나 정치투쟁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퇴진을 내걸었을 때 모든 투쟁 동력을 집중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런 계획 없이,

투쟁 일정은 임단투 시기집중으로 맞추어놓고 퇴진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애초부터 잘못 짜여진 투쟁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이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심장부인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총파업 대오에서 이탈하는 기막힌 사건이다. 울산에서는 효성에 경찰병력이 침탈하고 난 이후 섬유화학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선진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시가전을 방불케하는 강력한 투쟁을 장기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집행부는 가장 강성이라고, 정치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세력이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울산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총파업 대오에서 이탈해버린 것이다. 이는 총파업 대오를 결정적으로 흐트러버린 과오를 범했으며,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로, 노동운동 진영에서 연대투쟁과 치열한 고민의 기풍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울산에서는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이 다른 지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저 바라만 볼뿐이었다. 현대중공업 콜리앗 투쟁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은 그 콜리앗이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전노협의 연대투쟁이 전개된 데 이유가 있다. 공권력 침탈을 계기로 전국적인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 노동운동에는 그런 기풍이 희미해지고, 상반기 투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연대투쟁의 새로운 기풍을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둘째,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상반기 투쟁의 막바지에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권과 거래하여 투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러나려는 정권과 거래하고 투항하는 지도부, 그 지도부가 과연 정권 퇴진투쟁의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가?

단호함, 결단력! 이것은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위원장이 사사로운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면 그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반대로 사사로운 일을 잘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함과 결단력을 보인다면 그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김대중정권과 한판 붙자고 했으면, 혼자 싸우다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붙어야 한다. 특히 지도부라면 그렇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 부족은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한 이후에도 간혹 드러났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정권과 거래하고 투항함으로써 지도력과 의지부족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퇴진에 반대했던 세력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셋째, 민주노총의 일부 또는 민중운동 진영 내에 있는 한심한 주장이 정권퇴진투쟁을 가로막았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타격으로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거나 그것이 노골적이니까 “정권 퇴진투쟁은 과도한 전술이다”는 따위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상반기 동안 민주노총 내에서 정권 퇴진투쟁에 대해 비토해왔으며,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정권 퇴진투쟁을 반대하였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힘을 빼고, 민중진영의 단일한 정권 퇴진투쟁 대오를 만드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세력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층, 대중운동의 기본인 단순명쾌한 투쟁을 거부하며 심오한 해석을 덧붙이는 세력,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세력들이다. 후진층이야 설득해서 끌어당기면 된다. 하지만 뒤의 두가지 세력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고립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세력들이다. 특히 이들은 상반기 민주노총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폄하하며, 하반기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넷째, 운동의 수준과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즉각적인 분노를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진보적 대안’을 대중적인 대안으로 내놓지 못했다. 이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몫이 크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드는데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 의료 파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 공교육 파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 등등 이러한 진보적 대안을 내걸고 투쟁하도록 대중운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 하반기 김대중정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위해

하반기 투쟁의 핵심은 철도, 한전발전산업노조, 지하철 등 공기업 노동조합의 민영화(사기업화) 저지 및 구조조정 분쇄투쟁이다. 철도와 한전발전산업노조에서는 민주노조를 쟁취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공기업노동자들이 하반기에 과감한 투쟁에 나선다면 상반기를 능가하는 투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의 교육총파업 여부가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파열구를 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진보적 의료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등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농민들의 투쟁이 터져나올 것이다. 개방농정과 농산물 저가 정책으로 파산과 절망에 빠진 농민들의 투쟁은, 작년 농민투쟁을 상회한다면 투쟁의 수위가 어느정도일지를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빈민들의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쇄하는 투쟁이 하반기에 가열차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반기 투쟁과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투쟁

을 요구한다. 그 어느 것 하나 김대중정권과의 전면투쟁 없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 김대중 정권의 칼날은 여지없이 우리의 목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따라 2002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하반기에 중심투쟁으로 형성될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투쟁을 전개하면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결론에 대신해서 김대중정권퇴진투쟁에서의 교훈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호한 지도력이고, 투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대중의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계몽군주인양 행세하면서도, 적과의 대치선이 치열해 졌을 때 뒤로 협상을 하는 행태야 말로 우리 민중운동의 기풍을 깎아먹음은 물론이요, 향후 민중권력 쟁취 투쟁에 있어 끊임없이 제5열(이적행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투쟁과 교섭은 병행될 수 있으나, 대중을 믿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결여되었을 때, 운동 지도자들의 사기행각은 시작된다 하겠다. 이것이 아프지만 절실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인 것이다.

## 2002년 앞둔 진보정당과 부문운동의 과제

사회당 기관지위원회 정책국장 \_ 정현수

### 1. 2002년을 전망하는 태도

또다시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2002년을 내다보는 현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정치지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실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민중운동 내에서는 민중 스스로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비판하고 민주당과 같은 수구 보수정당에 기대어 '개혁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태도가 있었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비판적 지지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이들은 개혁세력의 연합(이른바 민주대연합)을 통해 민중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정치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이러한 시도는 수많은 명망가들의 투항과 변절을 낳으며 실패로 끝났다.

다른 한편으로 선거투쟁의 공간을 부르주아 지배의 합리화와 권력 재편의 도구일 뿐이라는 관점 아래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권력 획득을 어렵게 한다.

한국 사회를 반세기 이상 떡 주무르듯 해온 우익 지배권력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연합과 분열을 거듭하는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통치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새 통치전략은 언제나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지배권력과 민중의 충돌을 '지역할거구도' 등 비본질적인 요소로 해소하는 것이었다. 오랜 군부독재정권은 때로는 직접 폭력을 통한 공포정치와 이에 굴종하는 언론·지식인 사회 등을 통해 지배를 합리화했다. 민간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배양식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민중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민중은 새 통치전략에 따른 비본질적인 대립구도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우익 기득권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았을 때 권력재편기에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정치적 표현인 '민중권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공간을 '지배권력 대 민중권력'의 구도로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중운동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이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국면에서 소극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또다시 실재하지 않는 지역적 이해를 쫓아 부르주아 지배권력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1987년 이후 민중투쟁의 성과를 눈에 띄게 빼앗기기 시작한 시점은 97년 IMF 구제금융 체제가 한국사회를 지배한 뒤부터이다. 그래서 지난 1997년의 대통령 선거는 초국적 자본의 대리자인 IMF 금융 지배 체제를 둘러싼 공방이 민중의 삶을 둘러싼 선택의 본질적 요소였다. 물론 'DJP 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반동적 보수연합과 호남 지역민의 정치적 소외감,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명분, 이인제의 출마, 한나라당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카드 등이 주요한 변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에 민중운동은 국민후보운동 진영과 민중후보운동 진영으로 크게 양분하였는데, 국민후보운동 진영의 '일어나라 코리아'와 같은 애국주의적 구호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것은 당시 대선에서 'IMF 재협상'을 약속했던 김

대중 대통령이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지난 4년간 IMF의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공기업 민영화와 대량 정리해고, '생산적 복지'로 표현되는 사회복지의 대폭 축소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즉 김대중 정부의 반(反) 노동자 민중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태도였다. 왕년의 비판적 지지파 일부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무런 맥락 없이 그 낡은 '민주연합'을 또 들고 나왔다.

한편 87년 이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즉 민중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려는 일관된 태도를 취했던 민중후보운동 진영은 대선후보 전술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민중후보운동은 보수정치권 내의 개혁파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이 일관된 태도를 취했으므로, 이 실패는 동시에 민중당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인 청년정당, 곧 청년진보당의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었다. 민중후보운동은 처음부터 DJP연합의 반동성, 김대중 개인의 어떠한 선한 의도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김대중 정권과 기득권층에 맞서는 민중 자신의 권력 수립이라는 태도를 2002년을 전망하며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당은 '민중에게 권력을!'이라는 근본적 태도로 2002년을 향해 나아간다. 대중투쟁의 상승국면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 이를테면

선거시기에도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건 정치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사회당의 실천은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권리를 빼앗긴 민중의 정치투쟁이 될 것이다. 사회당의 정치투쟁은 곧 투쟁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쟁취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2002년을 돌파할 것이다.

## 2.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반대'에 철저해야 한다

앞에서 지난 1997년의 대선은 한편으로 IMF 금융 지배체제의 한국 민중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 과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IMF 금융 지배체제가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었다. IMF의 요구에 굴복한 김대중 정부는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등 주요 산업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하였으며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실업 노동자의 증가는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의 주요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러한 경쟁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7년 이후 생계형 노점상도 급증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때와 집권 이후 부산에서의 연설에서 "IMF 환란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계형 노점상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곧 탄압으로 돌아섰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인해 물건을 빼앗기고 단속반의 금품제공 요구, 구청 등에서 용역강패를 동원한 대책 없는 노점상 강제 철거를 저질러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의 손님들을 위한 가로정비 및 미화,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 등을 명목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노점상 뿐만이 아니다.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과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등 민중의 삶은 어떠한 시민적 권리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의 본질은 현 정치 권력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우선하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정치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박탈한 결과다. 노동자와 노점상·철거민 등 도시빈민은 이처럼 자본주의가 강요한 경쟁의 최대 피해자다.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전통적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대안인가'라는 의문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대안 체제의 부재는 한국 민중운동에도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아노미 상태 - 낡은 체제는 몰락했으나



그를 대체할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는 공백, 혼란상태 - 를 낳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적이 무너지고 나자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같았던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민족적·인종주의적 대립,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공격과 무보호 정책 등 심화된 자본주의의 모순은 국가간 불평등과 국내적 불평등으로 표현된다. 먼 나라에서의 테러사건에 의해 급속히 경제가 위축되기도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무의미해지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더구나 불경기와 공황이 오면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이것이 세계 민중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최근에는 반세계화와 국제적 민중연대 운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맞선 유효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국회를 통한 '대의제 정치', 즉 형식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생존권 박탈에 대한 정치적 정당화 과정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다수 민중이 자신을 억압하는 기득권층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중 스스로의 정치투쟁을 통한 진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으로 가려진 우익 기득권층과 자본의 배타적 지배체제가 새로운 통치전략으로 그 지배를 항구 영속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적합한 조직형식이다. 우선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선거공간에서 정치투쟁을 병행함으로써 민중 자신을 국민적인 정치적 실체로 등장하게 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분적 개혁과 정책적 대응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은 자본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민중이 이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대안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념에 따른 노선은 소수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 예로 유럽 진보정당들의 사회민주주의적 시도는 자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소수자들과 초과착취를 당하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의 고통을 눈감아 왔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자본에 의해 분할된 특정 계급계층의 대변자가 아니어야 한다. 온갖 개혁적 환상에 맞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이념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반대에 철저히 자본의 분할전략에 휘둘리지 않는 진보 정당만이 민중과 민중의 지역적 대립,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립, 자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대립, 여성·장애인·소수자 등 자본주의 희생자들의 상호 대립을 극복하고 민중 스스로의 권력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진보정당 운동에서 자본주의 반

대에 철저히면서, 동시에 국가주의적 맹신에 빠지지 않는 모든 세력의 연대가 참다운 민중 권력을 향한 길이다.

### 3.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에 종속된 부문운동이 아니라 진보정당을 통한 '부문운동 스스로의 정치적 진출'이다

한국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열린 공간에서였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자본과 노동자간 모순을 주요한 대립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과 같은 전국적 노동자 대중조직의 건설과 발전은 노동자운동을 민중운동의 중심영역으로 형성시켰다.

한편으로 보수대연합 체제인 민자당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인 대통령의 낯선 지배체제가 등장했고 이들의 통치 방식은 훨씬 세련된 것이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도 투표장에 선 민중은 계급이 아니라 시민이었고 계급적 적대와 갈등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 중층적으로 드러났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이 계급적 모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유보된 시민적 권리의 확대라는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들은 여러 영역의 부문운동을 등장 시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반대자가 아니며 지배권력의 통치 전략에 흡수되거나 활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부문운동의 과제를 논하기 앞서 부문운동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부문운동은 첫째로 노동자운동,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청소년운동, 소수자운동 등 운동의 주체를 드러내는 계급·계층적 운동과 둘째로 인권운동, 환경운동, 정보통신운동, 언론개혁운동, 교육개혁운동, 과학기술운동, 평화정착운동, 정치개혁운동 등 영역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부문운동 가운데서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오로지 어떠한 부문운동이 특정한 조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부문운동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때로는 중첩되며 또 때로는 대립적이기까지 하다.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각각 고용안정과 환경의 관점에서 대립했던 예가 있다. 그런데 이렇듯 각각의 목표에 충실한 부문운동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념과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문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자본의 분할 전략에 포섭되고 활용·관리

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는 다양한 계층, 부문과 연대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연대의 방식은 정당이 전체이고 다른 것은 부분이니 정당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사회당은 98년 창당 때부터 당헌에서 다양한 부문과 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보수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장애인을 차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탁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조차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 등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왔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만의 고유한 과제가 아니라 는 것은 민중운동에서 이제 상식이 되었다. 정치세력화는 각 부문운동의 목표, 즉 노동자 민중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각 부문운동의 목표를 상실하면서 진보정당의 권위에 종속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민중당의 실패는 진보정당 운동이 자본주의 반대에 철저하지 않은 명망가에 의존하였을 때, 또 부문운동 자신의 요구에 철저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주었다. 민중

당 당권파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현재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이재오가 교육 5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노동자를 대변해 왔다고 자부하는 김문수가 98년 정리해고를 도입한 신한국당의 날치기 통과에 기립 찬성을 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밖에 이우재 등의 배신과 85년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 의장이었던 민주당의 김민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의 전향, 보수정치권에 이용당할 대로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장기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시절 김대중 정권의 민화협과 손잡더니 민중을 배신하고 금벙지를 단 이창복, 386세대 출신의 개혁의원이라며 김대중에게 큰 절을 올린 허인희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386 의원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던 이들의 민중 배신적 행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보정당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진보정당의 권위에 의해서도, 민중운동 세력 내부의 정치적 고려나 지분에 의해서도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선거 투쟁에서 사회당은 동대문에서 여성운동이었고 구로에서 노동자운동이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문운동의 과제를 전면 에 내거는 것이 협소하게 보인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당

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금기를 철저히 깨뜨리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반대에 철저한 당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순과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4. 결론

한국의 정치연구자들로부터 '지역 = 한국 정치 최고의 변수'라는 등식을 종종 듣게 된다. 지난 56년간 한 번도 우익 지배권력의 정치적 독점으로부터 해방의 경험을 갖지 못한 한국 국민에게는 지역이야말로 최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키워드'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보수 우익정당을 매우 단순하고 뿌리깊은 효과아래 두었다. 1인 보스 체제와 지역정당화는 보수3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을 각각 이회창당, 김대중당, 김종필당이거나 영남당, 호남당, 충청도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각 지역의 민중은 자기 지역 출신의 보수 정치인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어도 삶의 조건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중이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조직화와 권력으로서의 상승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으로 득표하고 어떻게 투쟁하여 국민적 세력으로 성장

하는가. 그것은 결코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지지 않는다. 민중은 스스로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어떤 조건에서도 굽하지 않고 끝까지 대변하는 변치 않는 정치적 대표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문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와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을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에 입각하여 결코 굽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지지야말로 민중의 이념적 선택이자 민중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2년을 앞둔 진보정당과 부문운동의 과제는 우선 보수 우익권력에 맞서 권력의 대회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민중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위한 비타협적 투쟁과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투쟁 민중의 확대와 이들의 정치적 조직화를 통해 가능하다.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승리할 것이며, 좌파정당의 국민적 세력으로서의 성장은 더 이상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국가권력이 봉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투쟁의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해방이며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목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생산의 주체’ 이자  
이 사회의 ‘실질적 주인’ 으로서

노동자의 힘 \_ 강령위원회

왜 노동자 계급 정당인가?

‘생산의 주체’ 이자 이 사회의 ‘실질적 주인’ 으로서

1. 들어가며

자본주의가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수많은 인종, 민족, 문화,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오직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가치나 삶의 행복 따위는 찾을 수 없고, 끊임없는 자본의 자기 증식 욕구만이 있을 뿐이다. 자본은 이윤을 증식하지 못하면 자본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없으며, 자본가는 이러한 자본의 존재 의의를 실현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을 실현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운다. 그들은 이윤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가? 한시라도 자본의 눈밖에 나면 살아갈 수가 없다. 노동자는 자본에 직접 종속되어 노동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농민은 자본의 요구대로 식량을 상품으로 생산할 뿐, 농업 생산에 기반했던 자신의 생활공동체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도시에는 자본에 의해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공장에서 해고되어 하루의 생계가 막막한 실업 노동자, 노동현장에서 차별 받다 못해서 급기야 자신의 성을 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 장애를 딛고 일어서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음지를 살아야 하는 장애인, 새벽부터 인력시장으로 나가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일용직 건설 노동자, 가게 하나 얻을 돈이 없어 길거리에 자판을 펼치고 춤디추운 한겨울에도 자그마한 불씨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층마들, 허울 좋은 자본가 세상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빗을 내어 겨우 마련한 포장마차를 뺏기고도 흐를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노점상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길거리에 내다버린 수많은 노숙자들. 이것이 자본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회의 밑바닥으로 몰아내친 우리 사회의 명백한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고, 이 현실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펼쳐 일어나 실천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자본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서, 자본에 의해 몰락한 농민 계급, 그리고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는 빈민 계급은 오직 하나의 이유로 뭉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간'을 적대하는 '자본'을 파괴하는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 2. 한국에서의 계급 투쟁과 근본 변혁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 전쟁 복구를 위한 원조 경제에서부터 박정희의 차관 도입에 의한 중화학 공업의 중점 육성 등을 통해서 짧은 기간내에 급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서방 언론이 떠들어댔

# 왜 노동자 계급이 정당인가?

## '생산의 주체'이자 '이 사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도로 한국 자본주의는 적어도 수치와 외형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거의 전쟁과 맞먹는 수준의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속에서 10대 어린 소녀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 농촌에서 그야말로 뼈빠지게 일해야만 했다.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하고 모두들 도시로 도시로 향했다. 그러나 도시 또한 바라던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도시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소위 말하는 '박정희 신화'는 세월이 흐르자 오히려 한국 경제를 말아먹은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다. IMF 위기의 진짜 주범은 필 박한 김영삼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박정희에 의한 것임이 오늘날 만천하에 드러났다.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건설한 한국 자본주의의 아성은 오십 년도 지나지 않아 그 허약한 내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대중은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고 했다. 다른 자본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또한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계급 투쟁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71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기점으로 촉발된 노동계급의 운동은 광폭한 유신 치하를 거치면서 안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지배계급의 폭압적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한

노동계급은 87년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찾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을 광범하게 일으키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것이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민주노조의 깃발이 올려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수만의 노동자가 구속, 수배, 해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의 후퇴도 없이 가열찬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이후 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을 전국적으로 벌일 정도로 우리 노동 운동은 성장했다.

올해에도 노동계급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대우차 투쟁', '한통 계약직 노동자 투쟁', '의료 재정 파탄을 둘러싼 보건·의료 투쟁'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의 물결이 드높아가는 시점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자본 그 자체이며, 노동자와 민중이 하나의 단일한 의지로 단결하여 자본에 대한 투쟁을 광범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은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계급 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 생존권 사수 투쟁은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총자본의 국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계급 투쟁의 역사가 진전되면 될수록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자각의 정도는 급속히 성장한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존재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끊임없이 전세계적으로 사

## 왜 노동자 계급이 정당인가?

‘생산의 주체’이자 ‘사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회화되어 가는 반면, 소유는 무한히 소수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즉 생산의 사회화(사회적 생산)와 소유의 사적 성격(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질곡과 시일이 이 모순에서 파생된다. 여기서 사회화된 생산을 다시 사적인 생산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화된 생산에 조응하게끔 소유를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이 근본 변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근본 변혁의 중심에서 있는 세력은 바로 사회화된 생산의 담지자인 노동자 계급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지배 계급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 받고 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자본에 종속된 노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본의 침탈과 공세는 더욱 거세어진다. 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분리 타격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된 계급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여 일관된 계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기 존재에 걸맞게 자신을 변혁적 계급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대항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독자적인 정치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과의 명백한 대립 전선을 긋고, 그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실천해

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해방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실천적 행위의 중심이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인간 사회는 각각의 역사적 단계마다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했으며, 인간은 그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인간의 실천 행위는 반드시 행위하는 주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노동자 정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그것은 참된 노동자 정치를 구현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이 될 것이다.

### 3. 진보 정치와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즉 자본가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기본권이 달린 문제를 소수의 자본가 지배 블록이 기획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자본가 지배 블록은 자신들의 지배를 원활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군대·직장·가정 등에서 갖가지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법과 제도의 틀로서 규정한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인 1표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도로 도입한다. 이 속

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본가와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평등권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배 블록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제 맘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경찰·군대·감옥이라는 물리적 장치, 사법제도·관료제 등의 제도적 폭력 장치, 언론·교육 등 이데올로기 장치, 그리고 자본에 의해 유입된 막대한 돈의 권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속에서 '진보정치' 또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외치면서 아무리 부르주아 선거관에 뛰어들어가 본들 자본에 의해 펼쳐진 체제 내적 그물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양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회의 다수파를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강고한 지배 블록을 지탱하는 위의 여러 가지 국가 장치가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이 기대하는 근본 변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정치 제도일 뿐이다. 자본주의적 정치 제도에 기대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만큼 순진한 발상은 없다. 아니, 순진하기보다는 악의적인 행위이다. 노동자 정치를 자본주의 체제내에 가두어 두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동 운동 내 기회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확산되는 경향이다.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진출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 국회의원은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기획해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안은 기껏해야 자



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제도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이념을 승인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했기 때문이다. 설사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요구를 담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자. 다수당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한 관철되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들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고한 지배 블록이 낳은 국가 장치에 의해서 그러한 시도는 무산될 것이다. 이는 의회를 통해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의회 진출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자본주의 체제 한계를 인정하는 제한적인 정치 세력화에 불과하다. 이런 정치는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자본주의 내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계급 투쟁을 의회제도 안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모든 투쟁을 상층의 타협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은 이미 노동 운동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 협조주의 등이 그런 경향이며,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한 '진보정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투쟁을 멈추시오. 내가 협상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내겠소. 만약 투쟁을 너무 심하게 하면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오!" 이렇게 투쟁은 타협으로 무마되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약간의 떡고물만 받았을 뿐 여

전히 자본의 사슬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투쟁의 강도는 떨어지고 체제 속으로 투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 변혁의 전망은 온데 간데 없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이와 같은 '진보정치'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다. 의회주의 진보정치 속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대신한다. 이것은 부르주아 정치와 동일하다. 부르주아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한 표씩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를 뽑는 행위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또는 통치의 대상이 되는 길이다. 봉건 왕조 국가에서는 자신을 통치하는 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을 통치하는 자를 스스로 뽑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다르다. 노동자 정치란, 사회의 골간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의 제 문제를 기획하고 결의하고 집행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노동자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는 의회주의 진보정치와는 달리 노동자를 투표로 정치적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노동자 정치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두고 스스로 소외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진로와 전망을 밝히는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변혁해내고 노동해방, 나아가 인간해방을 목표로 삼는 계급투쟁의 정치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은 전국적 관점에서 전계급의 투쟁의 선봉에서 참된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생산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객관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 노동자 계급은 썩을대로 썩은 한 줌 부르주아지의 퇴락한 정치를 뒤엎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인간 해방의 기초를 닦는 민주주의의 전위투사이다. 노동자 계급만이 일관되게 자신의 투쟁을 인간 해방의 투쟁으로 이끌 수 있으며, 노동자 계급과 동맹한 피압박 민중 세력만이 해방의 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는 다른 피억압 민중들의 이해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 4. 노동자 계급 정당의 역할과 의의

지금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전계급의 계급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정치를 구현할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적 이해 관계를 둘러싼 투쟁은 전국적인 민주노조의 총연맹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제조직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정치적인 투쟁을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본과의 관계를 뛰어 넘어서 설정될 수는 없다.

민중 생존권 사수투쟁의 가장 철저한 투사로서의 노동자 계급이 자본의 공격을 끝장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구현하는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를 벗어나 타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지도하는 단일한 노동자계급의 정치 조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당'을 건설함으로써, 여타 민중들과 계급을 아우르고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자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주체'로 자신을 조직하고 훈련시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 국가 권력을 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볼 때, 당이 국가 권력을 접수 또는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즉 인민의 주권기구가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그 장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과 장치로 대체한다. 따라서 당은 국가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야기처럼 프롤레타리아가 지배 계급으로 조직되고 투쟁 속에서 지도적 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헤게모니 확보 투쟁을 지도하

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동맹한 피억압 민중 계급 제세력들이 노동자 계급의 지도 아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조직이 곧 당인 것이다.

과거 스탈린주의적 전위 정당은 당이 인민을 지도하는 '이성의 화신'이자 '강철 블록'이었다. 인민 대중은 당이 하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철저한 규율 속에서 투쟁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당관료가 권력을 독점하였고, 당관료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과 인민 대중은 대상화되었던 것이다. 의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이 노동자 대중을 투표행위에 묶어 들이므로써 대상화시켰던 반면,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정당은 대중에 대한 당의 일방적인 지도를 관철시킴으로서 노동자 대중을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노동자 정치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동자 계급 정당은 노동자 계급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지도-피지도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당이 노동자 계급을 조직적으로 하부 체계에 들이므로써,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들의 투쟁을 안내하고 선전함으로써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노동자 계급 대중과 투쟁 공간 속에서 함께 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즉 당의 지도적 원칙은 설득과 동의, 그리고 폭

로와 선전활동을 통해서 관철될 것이다. 한 사업장, 또는 한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전망을 갖도록 노동자 계급 대중과 끊임없이 결합하면서, 그 대중 스스로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당은 물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동자 계급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이후에 건설할 새로운 세계를 책임질 '대체권력'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노동자 계급 정당의 임무이다. 이 때 이후 권력을 책임지는 정치의 주체는 바로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이며, 그들이 전국적인 경제를 계획하고 회계와 통제를 실시할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 정당은 권력의 '바깥에 있는 조직'이다. 그것은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나 여전히 바깥에 있어야 한다. 당이 직접 권력을 장악하여 노동자 계급 대중을 하부에 두고 지도하려는 순간 스탈린주의적 관료주의의 악몽이 부활할 것이며,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제도 속에 들어가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순간 그 정당은 노동자 계급을 투표하는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고, 그러한 당 또한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포섭되어 들어 개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 계급 정당은 항상 제도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 '비제도적 정당'이다.

또한 노동자 계급 정당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와 참된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노동자 계급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대의에 동의하는 계급의 선진 분자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 정당이 아니라 전위 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앞선 전위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론은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 받고 수정된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 정당의 이론과 노선도 현실 계급 투쟁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당의 지도 노선과 이론적 생명력은 바로 현실 계급 투쟁으로부터 수혈 받아야 하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설할 노동자 계급 정당은 '투쟁 정당'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은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 주체로, 대체 권력의 핵심적 계급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 생산의 사회화에 조응하는 사회적 생산의 담지자가 바로 노동자 계급이며,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이후 사회를 책임질 유일한 주체라는 점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후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통제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혁명 이후에 갑자기 조직되거나 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한 훈련과 투쟁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대중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이 노동계급이 실질적인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 과정은 그 자체가 대체 권력을 조직하

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그 스스로 대체 권력의 주체로 훈련되고 조직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의미이며, 바로 노동자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당 구성은 어떻게 원칙 하에 구성되어야 하는가?

첫째,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자로 훈련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대체 권력과 노동자 계급 정당은 직접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정치적 활동에서 그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활동을 스스로 체험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 정당의 조직 구성은 철저하게 각 당원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 즉 그들 스스로 당의 모든 활동과 내용,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져야 한다.

둘째, 당 구성의 원칙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리를 극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며, 당에서 지식 독점이나 정보 독점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식 독점이나 정보 독점은 소수 엘리트 또는 정치적 훈련된 사람들에 의한 당 권력의 장악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리를 더욱 격화시킨다. 계급 사회를 형성한 기반이 되었던 정신 노동과 육체 노

동의 분리(분업)를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당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당내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생산자들이 그 스스로 전국적인 생산을 통제하고 기획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셋째,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동일한 조직 형태를 가져야 하며 아래로부터 당원들에 의해 직접 통제되고 결정되며 상부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 조직 형태를 가져야 한다.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한 의결 집행 조직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누구든지 의결과 집행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의결과 집행, 즉 의회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서의 의회는 단순히 손을 드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어 '국민'의 대의는 부르주아 정당의 이해 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는 의결한 자가 직접 집행을 하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염려는 없다. 또한 당 조직의 하부에 있는 당원들은 상부의 집행을 직접 감시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은 노동자 계급 정당뿐만 아니라 이후 새롭게 건설될 대체권력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다.

우리가 건설할 정당의 핵심은 오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정치 조직 그 자체를 스스로 운영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 활동을 통해서만 노동자들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제도적 투쟁 정당'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사회의 경제와 생산 메카니즘, 그리고 생활을 기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 체득하는 그런 정치 조직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 투쟁'의 핵심 의의이다.

## 해방수레를 끌며 6호

20001년 10월 25일

발 행 \_ 전국노점상연합

발행인 \_ 김홍현

편 집 \_ 전국노점상연합

주 소 \_ (우110-552)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313-2 형제빌딩 2층

전 화 \_ (02)2232-0685~6 팩스 \_ (02)2232-0687

Http://www.nojum.org e-mail\_nojum.org

ID\_전노련(참,나우) poverty(천)

해방수레를 끌며 6호는

더욱발전된 제작을 위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값 10,000원

